

최저가낙찰제 덤핑방지 보완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단체장 간담회서 밝혀

국무조정실

은 지난 7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 5단체장 등 산업계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정부는 민간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고 건설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덤핑방지책을 충분히 보완한 후 신중히 접근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교통부 최재덕 차관은 “올해 건설수주액 감소폭이 일반 SOC부문 2조원, 주택부문 11조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에 대한 무분별한 부동산 억제 조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TF에서 연구중이며 저가심의기준 강화, 보증제도 개선 등 덤핑방지책의 시행성과를 보가며 단계적으로 신중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절차도 조속히 마련해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주택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건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재경부와 건교부 차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한 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개방체제 속 경쟁구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역시 R&D투자를 통한 기술력 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역시 정책 예측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규 정책 채택시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며, 내각 역시 이를 착실히 실행해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하라”고 당부하였다.

